

 금융위원회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			 대한민국 대정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2021.5.7.(금) 조간	배포	2021.5.6.(목)	

책 임 자	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담 당 자	윤 동 옥 사무관 (02-2100-2951)
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	태 현 수 사무관 (02-2100-2961)
	금융위 중소기업금융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김 성 조(02-2100-2860)		안 남 기 사무관 (02-2100-2861)
	중기부 기업금융과장 권 영 학(042-481-4545)		신 연 재 사무관 (042-481-4385)
	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 이 옥 형(042-481-4383)		윤 성 웅 사무관 (042-481-4485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노 영 후 팀 장 (02-3145-8050)
	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장 박 상 원(02-3145-8350)		김 범 준 팀 장 (02-3145-8356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양 해 환(02-3145-7460)		김 경 수 팀 장 (02-3145-7455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박 광 우(02-3145-6770)		이 건 필 팀 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양 진 호(02-3145-7550)		문 재 희 팀 장 (02-3145-7552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권 화 중(02-3145-8070)		박 현 섭 팀 장 (02-3145-8072)
	은행연합회 상무 김 평 섭(02-3705-5050)		여 인 채 부 장 (02-3705-5704)
	생명보험협회 상무 신 영 선(02-2262-6621)		조 성 준 부 장 (02-2262-6689)
	손해보험협회 상무 서 영 중(02-3702-8580)		권 병 근 부 장 (02-3702-8571)
	여신금융협회 상무 이 태 운(02-2011-0710) 배 종 균(02-2011-0602)		김효석 부 장(02-2011-0743) 이경원 부 장(02-2011-0742)
	저축은행중앙회 상무 최 병 주(02-397-8602)		성 용 옥 부 장 (02-397-8640)
	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장 심 재 관(02-2145-9480)		강 용 구 부 장 (02-2145-9481)
	농협중앙회 본부장 최 문 섭(02-2080-5056)		윤 성 훈 부 장 (02-2080-3110)
	수협중앙회 상무 강 신 숙(02-2240-2040)		박 현 호 부 장 (02-2240-2200)
	신협중앙회 이사 박 영 범(042-720-1211)		김 일 환 본부장 (042-720-1300)
	산림조합중앙회 상무 김 용 배(02-3434-7123)		오 근 영 부 장 (02-3434-7230)

	산업은행 여수신기획부장 윤 종 열 (02-787-6901)		이 용 석 팀 장 (02-787-6915)
	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장 강 정 수(02-3779-6261)		김 경 린 팀 장 (02-3779-6267)
	기업은행 여신기획부장 백 상 현(02-729-7711)		이 상 민 팀 장 (02-729-7475)
	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본부장 유 광 희(053-430-4331)		이 종 구 수석부부장 (053-430-4332)
	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장 이 재 필(051-606-7460)		박 상 무 부부장 (051-606-7465)
	신보중앙회 보증기획부장 한 규 식(042-480-4030)		황 연 길 팀 장 (042-480-4031)

제 목 :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, 금융권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.

◆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작년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금년 중 신용등급 하락, 대출조건 악화 등을 우려

* 중소기업의 60.3%가 '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(중기중앙회)

◆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우려를 고려하여, 다음과 같이 지원할 계획

❶ 코로나19로 일시적인 영업상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을 충분히 반영 가능 [비재무평가 등을 통해 고려]

☞ 은행, 보험사(법인 대상), 정책금융기관* 등 비재무평가가 포함된 자체 내부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

* 산은, 수은, 기은, 신보, 기보, 지신보

❷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인 경우, 한도·금리 등에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 등을 운영

☞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(보험사(개인 대상), 여전사, 저축은행, 상호금융) + 위 ❶ 해당 기관

◆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❶과 ❷가 적용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도 면제 [금감원장 명의로 공문 발송]

1 추진 배경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,
 -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를 9월말까지 연장('20.4.1.~'21.9.30.) 하고, 연착륙 방안('21.4.1.~)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.
- 이러한 노력을 통해,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이 대출 원금·이자를 급박하게 상환해야 하는 부담은 줄었으나,
 - 코로나19로 인한 '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, 금리·한도 등 대출조건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*가 있습니다.

※ **중소기업**의 경우, '20년 영업실적 악화로 신용등급 하락,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*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- * 중소기업의 60.3%가 '20년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('20.12, 중기중앙회) → 3.29일 금융위원장 참석 중기중앙회 간담회에서도 동일 우려 제기
- 한편, **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**는 신용등급 결정시 대표자의 연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,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로 연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신용등급 하락의 우려는 작은 상황입니다.

-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도 규정 미비나 점사·제재 우려 등으로,
 - 향후 회복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
-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,
 - 일시적으로 영업이 악화된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이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.

2 신용등급 하락 등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

①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.

- 은행, 보험사(법인 대상),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금년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평가*시,

* 통상 금융기관은 여신거래기업에 대해 ①「외부감사법」상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분기, ②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하반기 중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(연 1회)

-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*하겠습니다. **[참고1]**

* 신용평가는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인 만큼, 평가 원칙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요인을 합리적으로 고려

【 자체 신용평가시 회복 가능성 반영 기준 】

-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*로서

*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

- ②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, 연체·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

- ③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*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

※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 판단 기준 (예시)

- ① 코로나19에 따라 매출이 일시 감소하였으나, 최근 매출이 회복세인 경우
② 업종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관성이 높아 향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매출 회복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
③ 매출이 회복되지는 않았으나, 동종 업종 평균에 비해 매출액 감소 등이 작아 영업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④ 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보유비율 등이 개선된 경우 등

-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,

- 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,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*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* 다만, 시장금리 상승 등 차주 전반에 적용되는 대출금리 상승 등은 가능

②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대출조건 등 불이익은 최소화하겠습니다.

- 금융기관*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에는,

* 재무평가만 실시하거나 외부 CB사 등급을 이용하는 금융기관(보험사(개인 대상), 여전사, 저축은행, 상호금융) + 위 ① 해당 기관

- 대출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
【 신용등급 하락 영향 최소화 조치 기준 】

- ①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*로서

*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

- ② 현재 정상 영업 중으로, 연체·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차주

- 금융기관은 위 기준에 따른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,

- 가산금리 조정(영업점 전결금리 조정* 등)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.

*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(Key Performance Indicator, KPI) 변경

③ ①과 ② 관련 대출에 대하여 검사 및 제재를 면제하겠습니다.


-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①과 ②를 고려하여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는,

-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겠습니다.

➡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 발송 예정

3 향후 계획

- 각 금융기관은 5월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,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,
 - 6.1일부터 동 기준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입니다.
- 금융감독원은 5월 중 금감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여,
 - 금융기관이 위 기준에 따른 대출을 실시한 경우 검사·제재 대상에서 제외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.

 공공누리 공공자료를 자유이용하세요	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금융관리청 콜센터
--	--	---	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참고 1

은행의 신용평가 체계

□ (개념) 차주 관련 정보(계량·비계량)를 통해 적기에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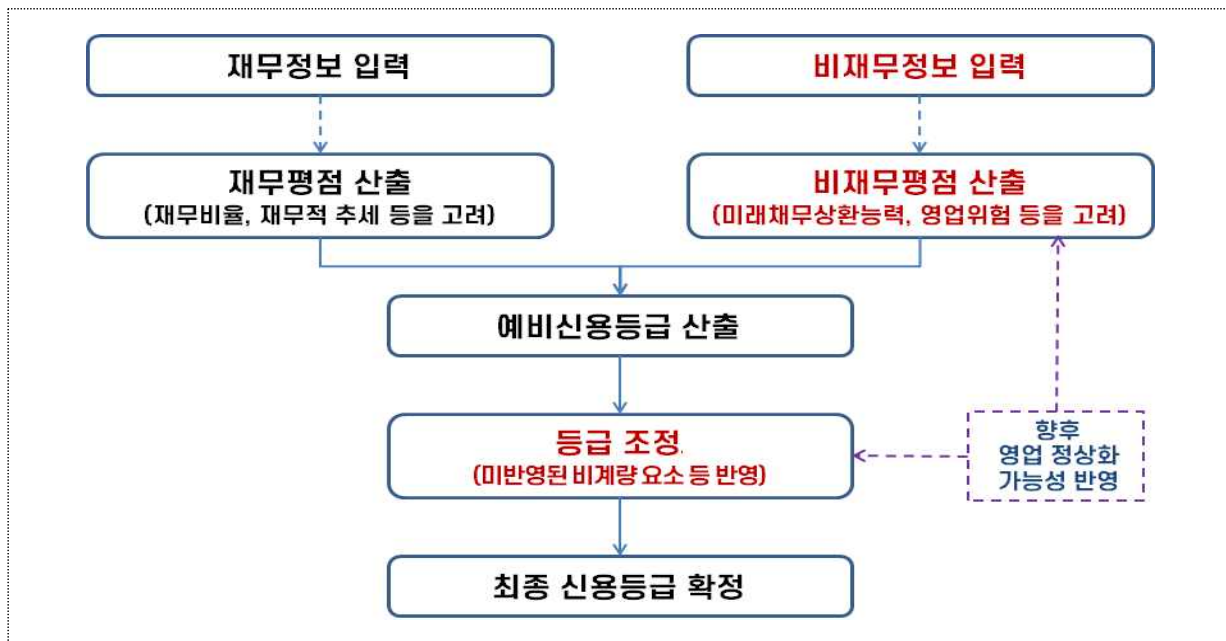
□ (절차) ①재무·②비재무 모형과 ③대표자 모형을 통해 예비등급을 산출하고 등급 조정 등을 거쳐 최종 신용등급을 부여

① (재무 모형) 매출, 부채비율 등 과거 재무실적 등을 중심으로 통계적 방법을 통해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모형(계량)

② (비재무 모형) 산업위험, 경영위험, 신뢰도, 산업 내 지위 등 재무적 특성 외에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평가(계량·비계량)

③ (대표자 모형) 대표자의 연체정보 등 금융거래이력을 통해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며 개인사업자 평가시 높은 비중을 차지(계량)

< 신용평가 절차 >



< 기업 규모별 평가모형 적용 방식 >

- 외부감사 실시 법인 : 재무 모형(비중 높음) + 비재무 모형
 - 외부감사 미실시 법인 : 재무 모형 + 비재무 모형 + 대표자 모형
 - 개인사업자 : 재무 모형 + 비재무 모형 + 대표자 모형(비중 높음)
- ⇒ 개인사업자는 신용평가시 대표자의 연체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

1.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평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인지?

- ☐ 금융기관의 내부 신용평가는 기본적으로 국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, 금번 조치로 인해 평가 체계가 바뀌는 것은 아님
-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일시 악화되었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금융기관이 신용평가 과정(비재무평가 등)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임

2.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지?

- ☐ 신용평가지 회복 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서,
-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되어,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
- ☐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으나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하여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,
- 차주의 지속적인 영업 및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

3. 금융기관별로 운영기준이 상이한 것인지?

- ☐ 금융기관별로 신용평가 모형에 차이가 있고, 차주에 대한 정보의 수준·종류도 상이하여, 신용평가 운영 기준도 다를 수 있음
- 신용등급 하락시 금리·한도 등 대출조건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도 금융기관별 여신정책에 따라 상이*할 수 있음

* 영업점 전결금리 조정, 본점차원의 금리 조정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